



# 지식재산 기본법, 우리 경제의 새로운 디딤돌



최태현 국장  
현)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지식재산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일본은 이미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펼쳐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백악관에 지식재산정책집행관을 임명하였으며, 중국도 2008년 ‘국가지재권전략강요’를 수립하여 대처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범국가적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결집할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다투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애플의 최대 부품 공급처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냉혹한 지식재산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역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식재산 전쟁에 차분하고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식재산 전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이탈리아의 한 특허전문기업이 국내 RFID(Radio Frequency Identity)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나 관련 협회 등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기피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경영 및 국가발전 전략에서 지식재산이 핵심적인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은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역량을 높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복잡한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해외에서 지식재산을 보호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분야는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식재산 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구 성과가 직접적으로 사업화되거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쟁이 신속·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며, 또한 중소기업이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5개년 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소관 업무별로 또는 지역별로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예전에는 누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얼마나 많이 빨리 생산하느냐 하는 제조업의 경쟁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이를 경영에 활용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경제의 흐름을 빨리 읽고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아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지식재산 역량을 하나로 모아 소득 3만 불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1. 6